

# 전임교수제 철폐론

김 동 훈

국민대 법학과 교수



사회 전반에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의 하나가 '기득권'이라는 말이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기득권이란 말은 이미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 그 수혜의 정당성을 묻고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른, 정당한 권리로서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억울하기도 할 것이므로 막연히 뽕뽕그러서 말할 것이 아니라 세분된 그룹별로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정당성을 점검하는 데에는 한 가지는 기득권을 누리는 수혜층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가 정당성이 있고 문호가 개방되어 있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수혜의 정도가 유사한 수고나 투자를 하는 경계 밖의 그룹에 비해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지는 않았는가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 장황한 서론을 쓰는 이유는 한마디로 대학의 전임교수는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기득권층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교수가 받는 처우를 선진 외국과 비교한다거나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교수가 얼마나 과중한 업무와 박봉에 시달리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기득권의 향유자로서의 교수를 얘기할 때에는 학문을 전업으로 하고 그로부터 생계를 꾸려나가는 집단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한다.

학문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대학이고 이 곳에서 이들은 크게 전임교수와 시간강사로 나누어진다. 학생들이야 다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두 그룹 사이의 차이는 가히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나는

바로 시간강사에 대한 이 전임교수의 기득권을 문제삼고 싶은 것이다.

우선 전임교수라는 기득권층에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정당성부터 매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과거에 고등고시 합격자들이 법률귀족화되어 많은 지탄도 받아왔지만 최소한 그들에게는 모두에게 개방된 가장 공정한 시험을 정당하게 통과하여 얻은 자격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교수가 되는 과정은 참으로 베일에 싸여 있다. 그 베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끔은 금품 수수 등의 오욕으로도 나타나고, 이른바 명문대학의 경우일수록 오로지 동문교수만을 선발함으로써 대학이라는 公器를 집안잔치로 전락시켜, 오죽하면 동문교수 비율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것을 논의하는 지경이 되었다.

또한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처우의 격차가 너무 크다. 지금은 전임이 된 동료교수가 강사 시절 딸아이가 몹시 아파도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어 부인과 같이 손 붙잡고 울기만 했다는 눈물 어린 회고를 들으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전임이라는 껍데기 하나로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차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어차피 대학의 인건비가 한정되어 있다면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처우는 제로섬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시간강사의 희생 위에 전임교수의 안락함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전임교수의 기득권층화는 그 동안 우리 대학사회에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기득

권이라는 것은 한번 얻게 되면 그 다음은 그것을 놓칠세라 지키기 급급하고 더욱 키워나가려는 속성이 있다. 한정된 전임이라는 서클의 문호를 개방화·유연화하기는커녕 더욱 걸어 잠그고 동업자의식으로 뭉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학 운영자와도 더욱 친밀해지며 시간강사군과의 벽을 높이 세워 왔다.

이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경쟁이니 평가니 개방이니 하는 단어들이다.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승진에 반영하자, 학생들로부터 강의를 평가받자, 처음 임용시는 계약교수제를 도입하여 시험기간을 갖자 등의 모든 진보적인 제안에 대하여는 여러 핑계로 거부하다 요즘 들어 시대상황이 강요하니 마지못해 따라가는 가지만 내심은 '그리운 옛날이여'이다.

전임교수의 기득권이 깊어만 가는 가운데 반비례하여 대학은 퇴보를 거듭하여 오늘날 대학은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퇴화된 집단이 되었고 오히려 학벌주의, 학연주의의 온상이나 되며 사회의 짐이 되고 있다. 텅 빈 연구실, 표절을 일삼는 교수, 보직만 좇는 교수, 불량 강의, 결국 불량한 졸업생의 배출로 이어지면서도 그 간에는 만성 수요초과의 독점구조로 인해 그럭저럭 버텨온 듯하다.

이제 대학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대학의 퇴보의 가장 근원인 전임교수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데 있다. 이에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조금 개선하는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아예 전임교수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릴 것을 주

장한다. 전임이니 강사니 하는 구분을 두지 말고 박사학위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은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하여 항시적으로 평가받고 그것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전임교수의 인건비가 강의와 연구의 대가라고 한다면 이를 분리하여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강의에 관하여는 제일 확실한 기준은 강의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평가이다. 매학기 말 학생들의 평가점수에다 강의 경력을 참작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 역대의 강사료를 받는 교수도 나오고 학생들로부터 배척받아 대학에서 퇴출을 당하는 교수도 나와야 한다.

연구에 관하여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연구비를 신청하게 하고 연구계획의 타당성을 전문가집단이 마치 은행이 기업 대출을 심사하듯 엄밀히 심사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연구비가 바로 연구실적물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의보다 연구에 더 재능이 있는 자는 연구쪽으로 특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점차 '평생직장'의 개념이 쇠퇴하고 전문지식산업에서부터 프리랜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나는 전문지식군인 대학교수가 이러한 경향을 선도하는 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실은 현재도 능력있는(?) 교수들은 교수직은 안전판으로 걸어놓고 다른 돈벌이 되는 일이나 광내는 일에 열

심인 경우도 많이 있고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이중적 행태를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을 바로 전임교수제가 제공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대학의 개념도 바뀌면 좋겠다. 요즘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큰 줄기의 하나가 아웃소싱, 즉 외부발주이다. 핵심분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다. 대학도 그렇게 많은 전임교수를 굳이 항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학생들과 그들을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수들을 연결해 주는 중개역할만을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교수들은 '65세까지의 정년보장'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며 특정대학에 고용되어 있는 안정된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능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신분보장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무한경쟁시대의 '마지막 유한계급'이라고 지목받는 교수집단이 먼저 그들의 근거 없는 기득권을 내어놓지 않는 한, 그들이 우리 사회에 생산해 내는 어떠한 개혁이나 비판의 발언도 진정한 공감과 반향을 얻지 못할 것이다. ■

---

김동훈/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계약의항서에 관한 연구", "계약법과 위험분배의 원칙", "약관규제의 판례와 이론" 등이 있다.